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코로나19로 결산차질, 자금 어려운 중소기업들 납기연장 신청 많아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의 결산업무가 지연되거나 납세 법인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일선 세무서에 법인세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23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차질이나 자금 문제로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은 아직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 세무서별로 사실확인 후 신청을 수락하는 시간도 필요하면 밀히 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다만 "중소기업들의 최근 몇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여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집중... 12억원 집 보유세 426→325만원

정부가 실수요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격안'에 따르면 이번 세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표 산정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실소유주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기준보다 101만원 적어진 325만원으로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가 적용되는 것.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실소유자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도 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올해 종부세 신규 과세대상 6만 9000명의 과세가 차단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만 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11억원에서 1억5800만원이 오른 12억5800만원이지만 세금 부담은 101만원 줄어든 326만원으로 책정된다.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